

교육 정책과 가정과 교육

윤 인 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I. 서 론

이 주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가정과 교육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표자가 그 동안 가정과 교육과정개발 등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교육개혁 등 교육과 관련되는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그 결과들을 보면서…… 가정과 교육의 총체적, 종합적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는 오늘 세미나 주제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가정과 교육의 큰 흐름을 결정짓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그 속에서 가정교육학자, 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가정과 교육의 현실은 교육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검토해 보는 것이 가정과 교육의 방향을 찾는 처방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데서 나온 주제이다.

우리가 경제, 외교,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정책이란 용어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 정책도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정책(policy)이란 말은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국가와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만을 정책의 주체로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 정책(Educational policy)에 관한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일찍이 백현기(1960)는 “교육 정책은 정치적 권력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어떤 교육계획이 실현되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김종철(1990)은 “교육정책이란 사회적·공공적·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관련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적

으로 제시하며,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성을 가지는 기본방침 또는 지침을 의미한다. 그것은 교육활동의 목표·수단·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위한 대강을 제시하며 협의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그 지침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위에서의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을 “국가와 공공단체 수준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마련되고 있는 지침”으로 보고, 그들이 가정과 교육과 어떤 관련을 가지면서 결정되고 시행되는가를 보고자 한다. 물론, 그 중에는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오늘은 주로 가정과 교육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정적인 것들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II. 본 론

김종철(1990)은 교육정책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형성 과정, 집행 과정, 평가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평가 과정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생각되어 여기서는 형성과 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육에 대한 현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가정과 교육

교육 정책의 형성은 교육 정책이 어떠한 경로와 단계를 거쳐 제기되고, 정부의 문제로 귀속되며 심의,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즉, 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가정과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의 문제일 수 있다. 물론,

정책 결정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느냐? 하는 인적 자원에 관한 문제가 큰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축은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심의회와 교육부의 중앙교육심의회라고 생각된다. 이 두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먼저 교육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35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 중 23명이 대학 총·학장, 교수이나 가정과 관련 교수는 없다. 그 밖에 언론인, 연구소연구위원, 학원협회장 등이며 초등학교 교사가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가정과 교육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인식을 가진 분이 있을까? 있다면 어느 분일까? 중앙교육심의회는 고등교육분과, 교직원분과, 평생교육분과 등 6개 분야에 6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발표자가 검토한 바로는 그 위원명단에서 가정과와 관련되고 전공자는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교육과정의 개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 7차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면서 가정교과가 없어지고 생활관리 과목이 생기고, 시간배당이 대폭 수정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총론 개정에 관계한 위원은 모두 37명인데, 그 중 교육학(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심리 등)전공자가 전체의 37.8%인 14명이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과정 국제비교, 현행교육과정 분석, 등 기초연구에서도 같은 현상이었다. 즉, 어느 곳에서도 가정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 관련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가정과 교육

교육 정책의 집행은 교육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통해 교육 정책을 본다면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교육 예산에 관련된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교육행정분야, 교수·학습 자료 개발분야, 가정과와 관련된 연구비 지원 등 몇 가지 예를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부 예산 개요를 보면, 대개는 해당연도 편성의 방향 중점 등이 서두에 제시된다. 1996년의

경우, 초·중등 교육 부문은 위험시설 개·보수, 택지개발지역 학생수용 등 교육여건의 개선, 유아 및 특수 교육의 진흥, 공업계고교 확충 등 고교 직업교육의 강화, 세계화·정보화 교육 부문은 정보화 교육의 강화로 열린 교육체제의 기반 구축, 외국어 교육 강화 및 국제관계, 재외동포 교육의 강화 및 국제교류 등이 예산 편성의 중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1990년 이래 거의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항목들이다. 즉, 유아교육,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공업계교육, 정보화 교육 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으나 가정과 교육의 강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고교직업과목의 강화와 같은 편성 중점에 가정과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업계 고교 확충 및 교육과정 개편처럼 주된 사업이 공업계 고교 위주로 되어 있다. 먼저 공업계 고교와 관련되는 최근의 예산을 보면 1995년 437억 8900만원, 1996년 613억 5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계고교 보통과를 공업계 학과로 개편, 공업계 고교 학급 증설, 공고 교육과정 '2+1체제'개편, 공고 공동실습소 설치·운영, 공고생 장학금 지급 등으로 활발한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계고교 내부시설 지원 및 일반계고교 직업교육 지원 상황과 관련된 예산도 1995년 363억 4200만원, 1996년 379억 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비공업계고교 학과개편, 실업계고교 내부시설 확충, 일반계 고교생 위탁교육 등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비공업계고교 학과구성에 직업교육과 관련된 가정과가 있을 것 같아 살펴보니 농고, 수고, 상고로 되어 있어 가정과는 제외되고 있었다. 또한 교육부는 인문계 중심의 고교 교육체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의 학생 비율을 1992년의 35%에서 1998년까지 50%에 이르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1995년 실업계고교를 25개 신설하거나 개편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보산업고등학교가 9개로 36%, 전자계 고등학교는 13개로 52%, 여자실업고등학교는 3개로 12%이며, 이 중 화정실업고등학교만이 가사실업계 교육과정에 있는 학과를 설치하고 있어 실업계 고등학교 관련 예산은 모든 부문에서 공업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 교육을 관장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행정직의 현황을 보면 시·도 수준에서 가정과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장학사의 경우 전국 시·

도 교육청에 가정교과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1분도 없는 곳이 있다. 또, 시·도 교육청 전체에 가정과 전공자는 몇 명인가? 과학 등 타교과와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그들의 소속도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 교직과 등 다양하다. 장학사가 없는 시·도의 경우 타교과를 담당하는 여자 장학사가 가정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면, 가정과 교육과 관련되는 정책이 그들에 의해 입안 될 수 있겠는가?

최근 교수·학습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수매체가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90년 이후 매년 80~90편을 제작하고 있다. 1995년에는 총 90편을 개발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용으로 59편이 제작되었는데, 그 중 국어 6편, 수학 8편, 과학 13편, 기술·산업 9편인 것에 비해 가정과는 단 1편도 제작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가정과 전공자가 타분야에 비해 얼마나 많은, 또는 쉽게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금의 학문분류체계에 가정교육이란 영역은 없었다. 어느 곳이건 과학, 컴퓨터 등 자연과학이 중심이 아닌가? 그 예로 교육부에서 교과교육 진흥을 위해 한국교원대학 교과교육 공동연구소에 지원하고 있는 연구과제 내용을 분석한 결과 92년도 21편, 93년도 26편, 94년도 20편, 95년도 25편, 96년도에는 41편, 총 133편이 그 동안 지원·수행되었는데 그 중 순수하게 가정교과와 관련된 연구 과제는 '94년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의 소비자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개발 연구', '95년 '중등학교 교원양성을 위한 가정과 교육학 교재 개발 연구', '96년 '초등학교 교원양성을 위한 실과 교육학 교재 개발 연구', 등 3편으로 전체 연구 과제의 2.1%에 불과하다. 이는 국어교과 15편, 수학교과 12편, 사회교과 14편, 과학교과 16편, 외국어 교과 14편의 연구 과제와는 대조적이다.

이밖에도 한국교육연감 등 각종 통계자료에 가정과와 관련되는 내용이 아예 없거나 잘못 되어 있거나 다른 과들과 통합되어 제시되는 등 부실한 점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이외에도 각종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가정과가 제외되고 있

는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주요 교육 정책은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학 관련학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교과 교육 전공자는 적으며, 교과별 전공자의 배려도 고르지 못하다. 즉, 가정교과 관련자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결과 가정과와 관련되는 중요 정책이 마련되거나 가정 교과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우리는 늦게서야 정책의 결정을 알고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결정된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는 수차례의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예산의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도 가정교과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중등에서 다루는 하나의 교과로서의 몫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교육의 여러 부문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하고 타교과에 우리의 고유 영역을 빼앗기고 그 결과 전체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 소비교육, 성교육, 영양교육의 주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들 영역이 우리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교육관련 각종 위원회에 가정교육 전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위원회에 소속이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행정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산의 배분이나 집행 과정에서 가정교육에 해당하는 몫이 얼마인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 강조에는 반드시 가정계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정계를 위한 예산을 배당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학교에서 가정과 교사는 가정과의 실험, 실습비가 과학과에 비하여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만 말고 그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하며, 다소 힘이 들더라도 배당된 실험·실습비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집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 교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교육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교육학자, 교육부의 예산 편성 담당자, 교육연감 등 통계 자료 담당자들이 가정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학회 차원에서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할 것이다.

○수립된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반영되는 체제가 마련되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과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정책의 수정, 보완 등이 요구된다.

○가정과 교육 관련자들에게 가정과와 관련되는 논문, 연구 과제 등의 평가가 의뢰되었을 때 가능한 좋은 평가를 해주므로써 전체 순위에서 가정 분야가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교육 관련 모든 사람들이 홍보요원이 되어 각계 각층(전국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가정과 교육 100년, 가정교육 홍보의 해 설정 등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활동이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1996).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 _____ (1996).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연구.
- 교육부(1992~1996). 교육통계연보.
- 교육학 대사전 편찬 위원회(1997). 교육학 대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 교과교육 공동연구소(1994). 교과교육연구: 1992~1994 - 연구 보고서 요약집 -.
- 한국교육신문사(1990~1996). 한국교육연감 1990~1996.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 한국교육행정학회(1996). 교육정책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